

한국 사회의 시기 및 계층간 복지국가 지지 변동에 관한 종단연구

노 법 래*

Ⅰ. 서론	Ⅳ. 분석결과
Ⅱ. 문헌검토	Ⅴ. 결 론
Ⅲ. 분석방법	

〈요 약〉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복지국가와 관련된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구성하는 한국사회의 인식의 내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한국사회에서 시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셋째, 계층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지지에 대한 측정과 관련해 정책관련 설문조사에서 흔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차별기능문항(differential item function)문제의 극복과 아울러 설명변수가 결과변수에 대해 지니는 평균적 효과와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종단자료에 적용하여 검토하는 두 가지 측면에 방법론적 주안점을 두었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 2010년, 2013년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지인식 부가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했다.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했다. 먼저 정책 인식 측정에 공간 모형(spatial model)을 적용한 기법 중에 하나인 Aldrich-McKelvey 척도법을 활용하여 복수의 관련 문항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측정했다. 다음으로 패널 데이터에 대한 분위회귀분석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선형분위혼합모형(linear quantile mixed effect model)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내적 차원은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지와 의료 서비스 공급에서 시장 역할의 강조를 양끝으로 여러 정책 이슈들이 나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복지 수급자나 빈곤자와 같은 정책의 주요 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도 복지국가 지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소득과 복지지위와 같은 계층 변수의 경우 복지국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seeme@daum.net)
논문접수일(2014.10.24), 게재확정일(2014.11.29)

가 지지의 특정 수준에서 영향력이 포착됨으로서 이들 변수의 수준 변화에 따라 복지인식의 분포가 달라지는 양상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인식은 국가책무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장의 역할 강조를 양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전반적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계층에 따라 특정 수준의 분위의 변화에 따른 인식이 분포변화가 발생하는 일종의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복지인식, 소득계층, 복지지위, Aldrich-McKelvey 척도법, 선형분위혼합모형】

I. 서론

2012년 대선은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아젠다로 대두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복지국가의 확대는 선거 경쟁에서 공통의 공약 사항이었다. 총량적 수준에서 복지국가와 관련된 공적 사회지출이 가시적인 증가를 보인 것은 90년대 말 이후로 볼 수 있지만(Hong et al., 2006; Kwon et al., 2007), 2012년 대선 국면과 이후의 정치적 논의는 복지국가와 관련된 논의가 일부 정치 세력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주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추동하는 하나의 공통 주제로서 떠올랐다는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 논의의 저변 확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Mill은 한 사회의 성숙을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함께 고려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감정(social feeling)’의 확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감정의 확대가 최근의 한국사회의 복지국가 논의의 기저에 있을 수도 있다. 한국 사회는 산업구조 및 정치적 차원에서의 급변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90년대 말 경제위기의 충격, 급격한 노령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심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혼란을 짧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여 왔다. 이와 같은 경험이 개인이 처한 위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크게 하면서 사회적 개인의 복원과 복지국가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었을 수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근래 한국사회의 복지국가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에 대해서는 최근 다수의 연구들이 적어도 탐색적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윤태 외, 2013; 노법래, 2012; 이상록 외, 2013)

복지국가 논의의 저변 확대와 아울러서 복지국가나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인식과 지지를 다루는 실증 연구들도 축적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층과 관련한 변수를 중심으로 다루기도 하고, 일부 연구들은 국가간 비교 연구를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실증적인 증거들을 축적해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복지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동태적인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은 기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¹⁾

여기에 더해 복지인식이 계층에 따라 수평적 변동을 보이는지, 수렴 혹은 발산을 하는지와 같은 분포 변화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계층과 같은 주요 요인들이 복지인식에 대해 지니는 평균적인 영향력의 규명에 관심이 있었다. 예를 들면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간의 복지인식의 평균적인 차이에 입각한 분석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과 같은 변수의 영향력을 검토해 온 것이다. 혹은 세대 간 복지인식의 평균적 차이를 바탕으로 그와 같은 ‘균열’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왔다. 이와 같이 설명변수에 따른 결과변수의 평균적 변화를 다루는 ‘수직적’ 형태의 분석도 복지인식과 같은 정치적 견해의 지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중요하지만, 계층 수준별로 정치적 견해의 분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수평적’ 형태의 검토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관련이 있는 최근의 흥미로운 현상이 이른바 ‘강남좌파’라는 용어의 유행이다. 이와 유사한 말이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리무진 리버럴’이나 ‘캐비아 좌파’와 같이 고소득 계층 내에서 발견되는 진보주의적 성향의 개인에 대한 냉소적 어감을 담아 쓰이기도 했다. 물론 ‘강남좌파’가 한국 사회의 복지인식 지형에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이 함의하는 바는 Stark(1997)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치적 인식에서 신념 체계와 계급적 이해의 뒤섞임이나 불일치가 한국 사회에서도 차츰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기에 따른 복지인식의 전반적인 변동 양상과 함께, 계층에 따른 복지인식의 변화를 평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분포적 차원에서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복지인식의 지형을 입체적, 동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라는 의미에서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복지인식’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는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 정책 대상자에 대한 태도, 조세에 대한 인식 등을 광범하게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한 태도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에 ‘복지인식’이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용성이 있다고 보고 용어를 통일하겠다.

II. 문헌검토

1. 연구 동향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는 분석 대상의 범위에 따라 크게 국가간 비교와 한 국가내 양상을 검토하는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는 주로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맥락이 시민의 복지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분석의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연구들은 국가별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분리된 분석모델을 통해 도출된 개개의 결과를 종합하거나,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의 활용과 같은 방법을 통해 통합된 모델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후자에 속하는 연구들은 주로 한 국가의 맥락에서 시민들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사회를 대상으로 상이한 제도적 맥락이 어떻게 시민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복지인식을 종단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주로 후자에 속하면서 계층의 영향력을 검토한 연구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복지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소득 수준과 같은 계층 변수나, 교육 수준이나 연령을 활용한 사회적 지위 관련 변수, 그리고 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로서의 위치와 관련된 복지지위 변수 등을 많이 다루어왔다. 서구 복지국가의 발달에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가 복지국가 발달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Korpi, 1980; Korpi, 1983)을 고려할 때, 복지인식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소득 계층과 관련된 변수들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빈번히 지적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계급적 이해보다는, 성별, 교육이나 연령과 같은 다른 사회적 지위 변수가 더 큰 관련성이 있다거나, 개인이 스스로 정의한 정치적 정체성과 같은 이른바 상징적 정치(symbolic politics)가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다(Hasenfeld, Rafferty, 1989; Sainsbury, 1996; Sears, Lau, Tyler, and Allen Jr., 1980).

그러나 복지인식에서 계층간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론적, 혹은 실증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복지정책은 많은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속한 인구 집단을 가로지르는 개입 방식보다는 시민의 구체적인 욕구에 따른 할당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급적 이해보다는 권리성, 관용,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복지인식에서의 이와 같은 ‘탈계급성’과 관련하여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복지지위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안상훈, 2000, 2009)나 가치체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상균 외, 1995; 노법래, 2012; 류진석, 2004)들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힘에 따른 복지국가의 발달이 서구만큼 분명하지 않고, 빠른 성장을 통한 복지 욕구의 대응이라는 발전주의적 사회정책 유산이 강한 정책 환경에서 복지인식에서의 이와 같은 탈계급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인식을 둘러싼 계급간 차이가 시기적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운태 외(2013)의 연구는 2007이후 세 시기에 걸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소득에 따른 복지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역동성을 통해 한국사회의 복지태도의 비계급성이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을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지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복지인식은 탈계급적 성격이 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정책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복지지위의 영향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교육 수준이나 가치체계와 관련된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넷째, 탐색적 수준에서 탈계급적 특성에 변화와 같은 복지인식의 동태적인 변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연구에의 함의

지금까지 개괄적인 수준에서 한국 사회의 복지인식 연구의 동향을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측정과 분석 모형에서 찾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먼저 복지인식의 측정은 개념의 속성상 복잡한 구조의 개념적 실체를 포착해내는 측정의 다차원성 문제의 해결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방법론적인 수준에서 측정의 다차원성의 문제는 크게 개념 측정에 포함될 차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문제와 이를 어떤 측정과정과정을 통해 하나의 척도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표 1〉 국내연구에서의 복지인식 측정 사례

관련연구	복지인식의 주요 측정 차원	차원결합
김상균 외(1995)	국가책무성, 보편성, 증세, 평등	결합(합산)
백정미 외(2008)	국가책무성, 증세, 평등	분리
안상훈(2009)	복지국가지지(국가책무성, 증세)	단일항목
김영순 외(2011)	국가책무성, 증세, 평등	결합(합산)
김사현(2012)	국가책무성, 정부평가, 평등	분리
노법래(2012)	국가책무성, 보편성	분리
김윤태 외(2013)	증세	단일항목
이상록 외(2013)	국가책무성, 보편성, 증세	결합(합산)
김수완 외(2014)	보편성, 평등	분리

<표 1>은 국내의 복지인식 연구를 측정차원과 분석에서의 결합여부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실증 분석에서 이처럼 다양한 차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복지인식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연구별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구체적인 변수의 활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각각의 연구들이 <표 1>에서 사용한 용어를 직접 쓰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개념상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묶어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국가책무성의 경우 김상균 외(1995)의 연구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정부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와 같은 문항에 대한 4점 척도 상의 찬성 수준으로, 노법래(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정책 영역별로 재원 마련,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을 합산한 값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설문에서 담고 있는 정책 영역이나 계량화의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은 설문들은 관련 정책 영역에서 정부의 책임 정도를 묻는다는 점에서 같이 묶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증세에 대한 내용도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 경우도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찬성하는가와 같은 의견을 주로 묻고 있다. 아울러 평등 혹은 불평등에 대한 내용도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연구에 따라 구체적인 설문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 연구에 따라서 성장과 분배와 같은 대비를 통해 설문하거나, 불평등의 당위성 혹은 재분배 강화의 필요성 등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정책의 대상 범위와 관련된 보편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이들은 복지정책이 노동능력이 없는 한정된 개인에게 국한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노동능력과 별개로 욕구 발생에 따른 전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에 대한 찬성과 같은 방식의 설문을 통해 정책 대상의 범위를 묻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존 연구를 통해 복지인식을 구성하는 차원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와 같은 차원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다음 질문이 될 수

있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단일한 지표를 구성하거나, 개별 차원들을 각각 결과변수로 활용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설문 문항의 합산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방식을 활용하여 차원의 축약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차원의 포괄적 구성 및 통합과 관련한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많이 고려되지 않는 중요한 복지인식 요소로서 정책 대상자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자 한다. Larsen et al.(2013)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의 주요 대상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복지인식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나태와 같은 개인의 부도덕함 때문에 빈곤 상태가 된다고 믿거나, 공적 급여가 ‘복지병’을 양산한다는 인식이 강한 개인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19세기말 Charles Booth는 영국 사회의 빈곤 문제를 다루면서 빈곤의 원인이 당시 부르주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나태와 같은 개인적 덕성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실직이나 저임금 혹은 노령, 질병과 같은 개인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실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Jones, 1994). 빈곤의 원인에 대한 그의 실증적인 관찰이 당시의 빈곤에 대한 공동체적 개입 옹호에 밑바탕이 된 점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지지는 정책 대상자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도 빈곤자와 같이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에 대한 인식을 복지 인식의 측정에 포함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차원축약과 관련한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 가운데에는 복지인식을 구성하는 차원 각각을 따로 분석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개별적인 해석과 각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구자간 임의성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개념의 구성적 타당성의 문제이다. 복지 인식이라는 현상이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상의 측정에서 차원을 동시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 개념의 구성 요소를 따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개념을 충분히 다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표를 통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지표를 통합한 기존 연구들은 복지인식과 관련된 하위 문항을 합산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책 분야에 대한 설문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성을 띠는 차별기능 문항(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DIF)의 문제이다. 이는 말 그대로 응답자들이 같은 문항에 대해서 다른 반응과 해석을 보임으로서 정책 분야의 인식 조사에서 개인 간 비교불가능성(interpersonal incomparability)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Brady, 1985; King, Murray,

Salomon, and Tandon, 2004).

정책 분야 연구에서 DIF는 특히 다음과 같은 원인들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정책 관련 설문에 응하는 개인은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선호와 감정적 요인들을 갖고 있다. 특히 극단적인 형태의 정책적 선호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 응답 내용에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인식을 측정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보다 집합주의적인 형태의 재분배 도구를 선호하는 개인이 있을 때, 그는 보험수리적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의 확대를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응답은 사회보험을 포함해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자유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척도상 차이는 일부 있을지라도 결론적으로 반대에 가까운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유사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결론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복지인식의 측정에서 DIF문제를 확대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awareness)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복지국가와 관련된 제반 정책 이슈들은 그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요구한다. 특히 사회보장이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정책들은 정책 목표의 선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정책 설계에 대한 높은 이해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복지국가 논의가 한국 사회에 전반에 확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압축적인 산업화와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와 관련된 왜곡된 선입견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 개인 간 인지도의 격차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개인들이 복지정책에 대해 상호모순적인 인식을 보이는 등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정책 이슈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와 앞서 언급한 극단적 개인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비교적 타당하고 안정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복지인식 연구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복지인식의 측정 문제에 이어서 본 연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분석 모형과 관련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평균 중심의 영향력 검토가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복지인식과 같은 정책 태도 연구에 있어 특정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른 정책 태도의 평균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태도 분포의 양상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의 변화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적인 수준일수도 분포의 변화일 수도 있다. 애초에 복지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갖고 있던 개인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계급적 이해에 입각해서 반복지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묘사

는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소득의 증가는 납세에 대한 거부감이 되었던, 복지 문제는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이라고 믿는 가치가 더욱 강화되는 방식이든 더욱 탄력적으로 반복지적인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는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분포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분포의 변동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간의 정책 지지의 유의미한 평균 차이로는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복지인식의 지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평균적 영향력의 추정에 기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영향변수의 효과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특히 정책 이슈와 관련해서 지나친 단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을 둘러싼 인식적 균열은 특정 영향 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수직적’ 성격을 띠 수도 있겠지만, 영향 변수의 각 수준이라는 조건하에서 분포가 달라지는 ‘수평적’ 성격을 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복지인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검토하는 중단적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치적 진영을 막론하고 복지정책이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부상하는 가운데서 시민들의 복지인식도 시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만약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 무대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시민의 인식 변화와 동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단기의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 지속적인 양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의 복지인식은 어떤 내적 구조로 이뤄져있는가? 둘째, 한국사회의 복지인식은 평균과 분포의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셋째, 계층에 따라 복지인식은 평균과 분포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복지인식의 다차원성과 관련된 측정의 문제를 계량정치학 분야의 시민 인식의 측정에서 DIF문제의 극복과 관련해서 활용되고 있는 공간모델(spatial model)의 응용 기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아울러 분석 모형과 관련해서는 평균과 아울러 분포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기법을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중단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복지인식을 둘러싼 보다 입체적인 요인간 구조와 함께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분석 방법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Ⅲ.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가운데서 복지인식에 대한 부가 조사가 이뤄진 2차(2007년), 5차(2010년), 8차(2013년)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종단 데이터로서 응답자 개인 및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변수를 제공한다는 점과 아울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통해 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설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의 요약 통계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에서 연속변수의 경우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명목변수의 경우는 범주별 관측수와 백분율을 제시했다.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전체 관측치는 7129건이다.

결과변수인 복지인식의 경우 실제 분석에 투입되는 값은 이들을 활용한 통합 지표이지만 <표 2>에서는 측정에 활용되는 7개의 문항을 나누어 각각의 요약치를 나타내고 있다. 복지인식의 측정에 포함되는 문항은 앞서 문헌 검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차원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였다.²⁾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복지지출을 위한 증세에 대한 찬성과 관련된 된 문항을 기존 연구에서 증세 및 평등과 관련 있는 항목으로서 포함하였다. 정책 대상 범위에 대한 두 개의 설문인 복지최소화와 국가에 의한 기본적 보장에 관한 항목을 보편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국가책무성을 묻는 문항으로서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인 의료와 보육에서의 국가 혹은 시장의 역할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했다. 끝으로 정책의 주 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으로서 빈곤의 원인과 복지 수급에 따른 의존에 대한 항목을 분석에 포함했다.

2) 문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증세),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복지최소화),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기본적보장),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사적의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무상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빈곤자나태),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근로동기약화) 근로동기약화에 대한 설문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항목은 5점 척도이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류	개념	측정	요약치
결과변수	복지인식	-조세/평등 : 중세	3.13(.92)
		-보편성 : 복지최소화	3.10(1.09)
		-보편성 : 기본적인보장	3.00(1.10)
		-국가책무성 : 사적의료	2.23(.93)
		-국가책무성 : 무상보육	3.73(.97)
		-대상인식 : 빈곤자나태	3.08(1.03)
		-대상인식 : 근로동기약화	2.65(1.20)
설명변수	시기	시기	2005년(n=1481) 2007년(n=1890) 2010년(n=3758)
	소득	표준화가구소득의 로그 값	7.5(.69)
	복지지위	공적이전의 가구소득대체율	9.12(19.63)
통제변수	성별	성별	여성(n=3807) 남성(n=3322)
	교육	교육연수	11.11(3.69)
	거주지역	거주지역 규모	서울(n=1148) 광역시(n=2005) 일반시(n=2598) 기타(n=1378)
	가족특성	혼인상태	미혼(n=693) 기혼(n=5367) 이별(n=1069)
	고용지위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한 분류	정규직(n=1669) 비경활(n=2575) 자영업(n=1023) 비정규직(n=1765) 실업(n=97)

주 1)이별은 이혼 및 사별을 포함.
2)비정규직은 설문에서 급여를 받는 일에 종사하지만 비정규직이 아닌 경우(일용직, 임시직 등)를 포함.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 가운데 하나인 시기는 분석에 포함되는 세 시기에 대한 명목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소득과 복지지위를 계층과 관련한 변수로 투입하기로 한다. 소득은 가구 전체의 가처분소득을 가구원 수의 루트 값으로 나눈 표준화 가구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했다. 후자인 복지지위의 측정은 가구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였는데, 여기서 공적이전은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액과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수급액을 합산하여 구하였다.

통제변수 가운데서 혼인상태의 경우 조사 시점에서 미혼이거나 기혼이 아닌 경우를 모두 ‘이별’로 분류하였다. 여기에는 이혼이나 사별 후 혼인상태의 변동이 없는 응답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지위의 경우 경제 활동 상태에 대한 분류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비정규직은 고용 상태가 임시직, 일용직 등의 유급의 비정형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2. Aldrich-Mckelvey 척도법

복지인식 연구에서 DIF문제의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극복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기법들 가운데서 하나인 Aldrich-McKelvey 척도법(Aldrich-McKelvey scaling, A-M 척도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기법은 가장 전통적인 기법이면서, 동시에 가장 간명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복수의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두 개 이상의 차원으로 축약하는 경우라면 다른 스케일링 기법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본 연구는 다수의 문항을 기초로 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전반적 지지수준으로서 복지인식이라는 단일 차원의 값을 추출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A-M 척도법을 활용했다.

Aldrich et al.(1977)는 정치학 분야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들이 비록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들에 대해서 문항 전체의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개별 문항간에는 비교적 정확하고 안정된 서열성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앞서 언급했던 사회보험에 대한 응답 사례를 여기에 다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보다 보편적이고 전향적인 소득보장 수단을 지지하는 개인이 수당(allowance)과 같은 보다 권리성이 강한 시책에 대한 강력한 선호에 의해 사회보험의 확대에 반대에 가까운 의견을 표명했을 지라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확대에 더 큰 반대 수준을 일관되게 표명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견해를 묻는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평균치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편이가 발생할지라도 항목간 서열성은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인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문항에 대한 각 개인의 응답치들은 한 개의 잠재 차원을 따라 각 응답 항목들의 실제적인 위치와 항목에 대한 개인의 반응차를 반영하는 무작위 에러가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M 척도법의 목적은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적 차이를 추정하고, 이 추정된 차이를 차원상의 각 항목의 실제적인 위치에 따라 개인의 성향 측정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A-M 척도법의 일반적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z_{ij} 를 j번째 항목에 대한 i번째 응답자의 위치라고 했을 때, A-M 모형은 j항목에 대한 개인의 응답은 항목 j의 차원상 실제적인 위치(z_j)에 대한 오차항을 포함한 결과로 이해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lpha_i + \beta_i z_j = z_{ij} + u_{ij}$$

이 때, u_{ij} 는 평균이 0이며, 동분산성과 독립성에 대한 Gauss-Markov 가정을 만족한다고

가정된다. \hat{z}_j 를 j번째 항목의 추정 위치라고 두고, $\hat{\alpha}_i$ 와 $\hat{\beta}_i$ 를 각각 α_i 와 β_i 에 대한 추정치로 둘 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hat{\alpha}_i + \hat{\beta}_i \hat{z}_i - z_{ij} = e_{ij}$$

Aldrich와 McKelvey는 추정된 항목의 위치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제약 하에서 오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추정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체 복지인식의 평균이 0이 되면서 분산이 1이 되는 분포를 만족하도록 각 개인별 복지인식을 조정한 값을 도출할 것이다. 이 경우 음의 값은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 의사를 양의 값은 복지국가에 대한 찬성을 의미하도록 부호의 방향을 조절하기로 한다.

3. 선형분위혼합모델

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A-M척도법을 활용한 복지인식의 측정값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향 요인 수준별 결과변수의 분포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를 활용하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복지인식의 시간적 변동과 보다 정확한 계수의 추정을 위해서 종단데이터를 활용하므로, 패널데이터 분석 기법인 선형혼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 LMER)에 분위회귀 기법을 적용한 선형분위혼합모형(linear quantile mixed model, LQMM)을 활용한다. 분위회귀와 LMER 각각에 대해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은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변수의 평균적 변동-혹은 병렬적 이동(parallel shift)-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설명변수의 변동에 따른 결과변수의 분포 변화를 다루기 어렵다. 분위회귀는 결과변수의 분포상의 서로 다른 지점에 대한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변수가 결과변수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결과변수의 분위별로 추정된 설명변수의 회귀계수의 조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와 같은 분포상의 변화를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McMillen, 2013). 물론 분위회귀

3) 평균이 0이면서 분산이 1인 정규분포에 대한 제약 하에서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선형모델의 해를 구하는 문제는 라그랑지안 승수법 문제(Lagrangian multiplier problem)를 따른다. 위의 식에서 사

용된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L(\alpha_i, \beta_i, z_i, \lambda_1, \lambda_2) = \sum_{i=1}^n \sum_{j=1}^q e_{ij}^2 + 2\lambda_1 \sum_{j=1}^q \hat{z}_j + \lambda_2 \left[\sum_{j=1}^q \hat{z}_j^2 - 1 \right]$ 의 각 추정치를 구하는 문제이다. A-D 척도법에서 라그랑지안 승수법을 통해 추정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Aldrich et al.(1977)를 참고 할 것.

와 함께 설명변수의 평균적 영향력을 검토할 수 있는 일반적인 회귀모형을 분석에 포함하여 양자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분석 결과를 검토할 때 편리하다. 본 연구도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해 결과변수의 각 분위에서 설명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함과 아울러 통상적인 회귀분석을 함께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향변수의 보다 정확한 영향력을 추정함과 아울러 분석 시점에 따른 복지인식의 변동 양상을 함께 포착하려는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다. 패널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기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 LMER)을 활용하기로 한다. LMER는 반복측정데이터에서 분석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개인차를 확률효과(random effects)로, 전체 분석 케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고정효과(fixed effects)로 분리하며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회귀 계수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외에도 LMER는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비교적 강건한(robustness) 분석기법이라는 점과 분석 데이터의 다양한 유형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아울러 꼽을 수 있다(Finucane, Samet and Horton, 2007; Twisk, 2013). LMER와 분위회귀의 결합에 관한 이론적 정립과 실제적인 추정 기법의 발전은 비교적 최근에야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Geraci and Bottai, 2014; Koenker, 200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분위회귀를 LMER에 적용한 LQMM 기법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면서, 영향변수의 평균적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LMER를 함께 분석에 활용해서 결과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A-M척도법을 활용한 복지인식의 측정에는 Poole(1998)에서 소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석 코드를 구성하고, LQMM은 통계 프로그램 언어인 R(R Core Team, 2008)의 lqmm 패키지(Geraci, 2014)의 관련함수를 결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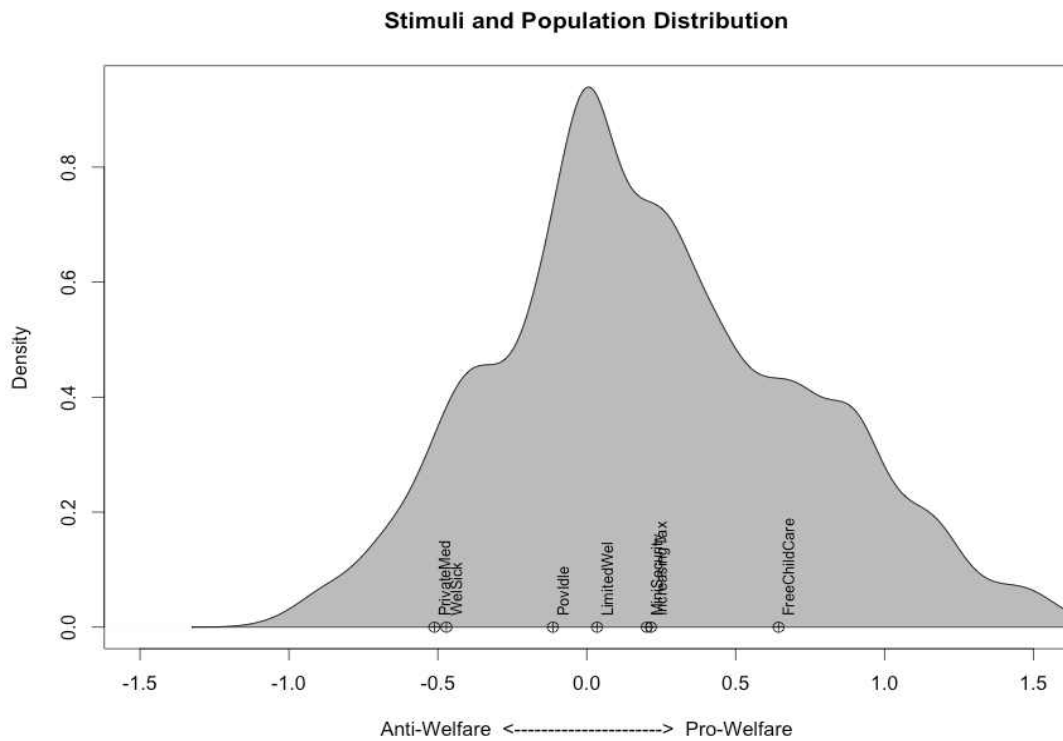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1. 복지인식

<그림 1>은 복지인식 관련 7개 문항을 사용해서 A-M척도법을 활용하여 측정한 복지인식의 전체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D 척도법의 특성상 측정치는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정규성을 띤다. 부호에 대한 조정과정을 통해 음의 방향으로 반복지적 인식, 양의 방향으로 친복지적 인식을 타나내도록 하였다. 아울러 복지인식이라는 단일 차원에서 측정에 포함된 7개의 문항의 서열구조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단의 가로축에 각 문항의 위치를 나타냈다. 각 위치의 절대값은 복지인식의 단일 지표를 만들 때 각 항목이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지니는가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즉, 절대값이 클수록 단일 차원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항목은 전체 응답에서 서열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반대로 0을 중심으로 가깝게 분포되어 있는 항목들을 응답별로 서열성이 분명하지 않고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들은 역으로 단일 차원으로 복지인식을 측정하는 본 연구의 접근에 의해 통합 지수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항목이 된다.

〈그림 1〉 A-M Scaling을 적용한 복지인식 의 분포와 항목별 서열 구조



반복지적 인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항은 복지인식 차원 상에서 -.512에 위치한 사적 의료서비스의 확대 지지(PrivateMed)였다. 다음으로 반복지적인 인식과 관련 있는 것은 복지의 근로동기 저해에 대한 찬성(WelSick) 문항으로서 -.471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문항으로서 공공부조 수급자의 게으름에 대한 찬성(PovIdle) 문항으로서 -.114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의 최소화에 대한 찬성(LimitedWel)부터

는 양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의 값이긴 하지만 거의 0에 가까운 .035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복지인식과 관련 있는 문항은 근로능력자를 포함한 최소한의 보장 지지(minimalSec)이었으며 복지인식의 차원 상에서 .201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에 대한 찬성(IncreasingTax)이와 비슷한 .216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친복지적 태도와 가장 강한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지지(FreeChildcare)로써 .644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 Scaling을 적용하여 DIF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한국 시민들의 복지인식을 측정한 결과 무상보육서비스, 복지에 대한 기본적 보장의 확보, 최소한의 복지에 대한 지지에 대한 지지 순으로 친복지적 인식이, 반대로, 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시장 역할의 확대, ‘복지병’의 문제, 개인의 결함으로서의 빈곤 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반복지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검토할 수 있었다. 이는 보육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정책 영역에 대해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복지인식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논쟁이 활발한 영역에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인식이 반대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측정 결과의 내적 구조는 사회정책에서의 할당 원칙으로서의 데모그란트(demogrant)의 강조와 보육과 같은 공공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활발한 노르딕 복지국가를 한쪽 끝으로, 의료와 같이 비교적 높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국가의 정책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 흥미롭다. 이와 같은 측면은 A-D 척도법을 활용한 본 연구의 복지인식의 측정이 지니는 타당성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인식의 양 끝에 위치하면서 서열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항목이 국가책무성과 관련이 있는 문항이라는 점은 기존 연구와 관련지어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문헌검토에서 국가책무성과 관련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복지인식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다뤄졌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 변수간 복지인식과의 상관성

변수종류	변수	요약치	
명목변수		평균(표준편차) F / t	
	시기	2005년: .15(.50)	F=27.63***
		2007년: .20(.53)	
		2010년: .26(.51)	
	성별	여성 : .19(.51)	t=4.93***
		남성 : .25(.52)	
	거주지역	서울 : .27(.57)	F=2.52
광역시: .21(.51)			
일반시: .22(.53)			
결혼	미혼 : .27(.57)	F=3.29*	
	기혼 : .21(.51)		
	이별 : .21(.51)		
연령	2030 : .20(.56)	F=2.53	
	4050 : .24(.53)		
	60+ : .22(.49)		
고용지위	정규직 : .24(.54)	F=1.113	
	비경활 : .21(.51)		
	자영업 : .19(.49)		
	비정규직 : .22(.51)		
	실업 : .23(.59)		
연속변수		r	
	로그소득	.02	
	소득대체율	.04***	
	교육연수	.06***	

* p<.05, ** p<.01, *** p<.001

〈표 3〉은 분석 모델에 포함되는 변수와 복지인식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것이다. 명목변수의 경우 하위 범주별 복지인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범주별 복지인식의 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다. 연속변수의 경우는 복지인식과의 상관성을 Pearson's r 로 제시하였다.

먼저 시기별 복지인식의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복지인식의 평균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구균등화 로그소득의 경우는 상관계수가 작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복지지위를 의미하는 공적 이전의 소득대체율은 복지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이 있지만 상관성의 크기는 다소 작게($r=.04, p<.001$) 나타났다.

기타 변수들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복지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r=.06,$

$p < .001$)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이른바 ‘학습된 이타성’이나 복지국가와 관련된 정책 환경에 이해와 같은 교육의 효과가 복지인식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특성을 나타내는 결혼상태의 경우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 생산자로서 가족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의 역할을 더 크게 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다소 흥미로운 결과로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복지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기존 연구들에서도 일부 관찰되는 결과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설명변수와 복지인식의 관련성을 단순 상관성 검토 수준에서 살펴본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계층과 복지인식 간에는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 가운데서 교육 수준이나 복지지위와 같은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평균적인 영향력에 초점을 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실시한 일차적인 상관성에 대한 검토와 전반적인 수준에서 결론이 유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 상관성은 보다 엄밀한 모형을 통해 다시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 연구의 주안점 가운데 하나인 복지인식의 분포의 양상을 다루는 이후 분석 과정을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2. 회귀분석

<표 4>는 복지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의 각 열은 복지인식의 각 분위별 설명변수의 회귀계수와 표준편차, 그리고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낸다. <표 4>의 마지막 열은 설명변수의 평균적인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한 LMER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LQMM과 LMER분석 모두에서 무작위 절편을 가정하였는데, <표 4>의 결과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고정효과 모형으로 다뤄진 영향 요인들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를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시기와 계층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기의 경우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분포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위별로 시기의 회귀계수 값을 통해 볼 때, 전 분위에서 동일하게 정적방향으로 비슷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과 2013년으로 올수록 회귀계수 값이 전 분위에 걸쳐 비슷한 크기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분위에 걸친 이와 같은 평행적인 변동은 LMER의 분석결과에서

도 반영되고 있다. 즉 계수의 평균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LMER의 결과에서 분위회귀에서 각 분위별로 시기에 따른 상승폭과 유사한 회귀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수준은 복지인식의 분위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인식 수준이 낮은 하위 20%와 40%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중위수준 이상의 분위에서는 통계적 유의도가 사라졌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소득 수준의 증가가 복지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복지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중위 수준 이상의 집단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포 전체의 양상을 따지면 이는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서 복지인식이 낮은 분위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이동에 의한 복지인식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위별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차별적 양상은 LMER의 분석 결과에서도 반영되는데, 평균적 영향력을 추정하는 선형모델에서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소득 수준이 복지인식의 평균 자체를 이동시키기보다는 분포를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소득과 복지인식의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는 이유로서 저소득층의 보수성 혹은 저소득층의 내적 상의성(heterogeneity)으로 인해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다소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인식의 상이성이 증대되며, 그와 같은 상의성은 주로 복지인식 수준이 낮은 개인들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욱 부정적인 인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태도의 균열은 중상층 이상의 소득집단 내에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복지인식에 대한 소득 수준의 효과가 부분적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복지지위를 의미하는 공적이전의 소득대체율은 소득 수준과 대칭적인 양상을 보이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복지지위는 소득 수준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부 분위에서 부분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복지지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인식의 상이성이 증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소득과 유사한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수준 증가에 따른 분포의 확대는 소득의 경우와는 대칭적으로 복지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복지지위가 높아질수록 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는 양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MER의 분석결과를 통해 복지지위가 높아질수록 복지인식이 평균적인 수준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대체율은 복지인식의 분포와 평균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과 복지지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함께 놓고 볼 때, 결국 개인이 복지국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국가로부터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정책 경험으로서 소득대체율은 평균적으로도 친복지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은 평균적인 영향력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소득에 따라서 복지국가로부터 구체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양상이 복지지위와는 달리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조세구조를 떠나 급여만을 놓고 볼 때, 저소득층에 유리할 수 있는 공공부조와 보험수리적 원리에 의거해 계층화(stratification)를 공고하게 하는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가 혼합되어 복지국가의 정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복지인식의 관련성은 제도적 맥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분위회귀를 활용한 본 연구를 통해 소득과 복지지위는 복지인식에 대한 영향력이 포착된 분위와 그 방향에 있어 대칭적인 속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은 그 같은 양상이 한국의 복지국가의 상대적 저발달과 관련된 과도기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고비용, 고복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소득간 복지인식의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비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당부분의 재원은 고소득층을 통해 조달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소득과 복지인식은 평균적으로 부적 관련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복지에서 복지지위와 복지인식의 정적인 관련성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한국의 상황을 저비용, 저복지로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 수준에 따라 각각의 영향변수의 영향력의 구조가 차별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모형에 포함된 나머지 변수들의 분석 결과를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수준의 경우 각 분위별 회귀계수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인식이 낮은 하위 20%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 수준의 증가에 따라 병렬적으로 복지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른바 교육수준에 따른 ‘계몽된 이타주의’(Derks, 2004)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이 복지인식이나 사회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연구의(김수완 et al., 2014; 김영순 & 여유진, 2011; 노법래, 2012; 이상록 & 김형관, 2013) 일반적인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은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증가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복지를 해야 한다, 아니다 식의 단순한 당위적 수준을 넘어서 어떤 정책 구성을 지닌 복지국가가 되어야 하는가로 논의의 수준이 상승하는 전환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표 4〉 분위회귀 분석 결과

변수	분위				Mean(LMER)
	20%	40%	60%	80%	
intercept	.142 (.103)	.149 (.103)	.163 (.104)	.169 (.104)	.151 (.088)
(2007년)					
2010년	.052* (.021)	.034 (.018)	.056** (.019)	.062** (.021)	.053** (.017)
2013년	.110*** (.017)	.094*** (.018)	.112*** (.018)	.102*** (.018)	.110*** (.017)
로그소득	-.042** (.012)	-.031** (.011)	-.002 (.014)	.020 (.014)	-.016 (.011)
소득대체율	.001 (.000)	.000 (.000)	.001* (.000)	.002* (.001)	.001** (.000)
(남성)					
여성	-.048** (.016)	-.046** (.016)	-.050** (.017)	-.059*** (.016)	-.052*** (.017)
(서울)					
광역시	-.017 (.021)	-.018 (.022)	-.014 (.024)	.009 (.025)	-.010 (.020)
일반시	-.023 (.019)	-.019 (.019)	-.012 (.019)	-.013 (.021)	-.019 (.019)
기타	-.036 (.022)	-.019 (.021)	-.022 (.023)	-.022 (.022)	-.024 (.022)
(미혼)					
기혼	-.018 (.027)	-.017 (.030)	-.023 (.027)	-.013 (.028)	-.022 (.024)
이별	-.033 (.030)	-.023 (.031)	-.015 (.032)	-.010 (.033)	-.016 (.030)
(2030)					
4050	.059*** (.016)	.060*** (.017)	.061** (.017)	.070*** (.019)	.063** (.019)
60+	.060** (.019)	.056** (.019)	.059** (.019)	.065*** (.019)	.060** (.020)
(정규직)					
비경활	-.011 (.022)	-.013 (.023)	-.007 (.021)	-.004 (.023)	-.009 (.020)
자영업	-.024 (.020)	-.023 (.022)	-.038 (.023)	-.026 (.024)	-.029 (.023)
비정규직	.002 (.017)	-.008 (.019)	.020 (.022)	.011 (.021)	.007 (.020)
실업	.011 (.060)	.009 (.057)	.012 (.058)	.012 (.058)	.005 (.055)
교육수준	.002 (.003)	.010*** (.003)	.010** (.003)	.012** (.004)	.011*** (.002)

* p<.05, ** p<.01, *** p<.001

흥미로운 점은 여성의 경우는 복지인식의 분위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남성에 비해서 복지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여성이 다른 서구 복지국가에서 관찰되는 것과 달리 남성에 비해 복지인식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비교연구(김영순·여유진, 2011; 백정미 외., 2008)가 있어왔다. 이런 결과는 여성이 남

성에 비해 복지인식에서 보수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 긍정적 복지인식과 강한 관련성이 있었던 항목이 무상보육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다소 의외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복지인식의 성별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령과 관련해서 20, 30대보다 이후 연령 집단이 각 분위별로 전반적인 수준에서 높은 복지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 50대가 전반적으로 복지인식이 높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른바 ‘민주화 세대’의 복지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상록 외(201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의 복지인식의 내적 구조는 보육이나 의료와 같은 주요 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인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역할이 강조되는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인식을 한 쪽 끝으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영역에서 시장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인식이 양극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 욕구의 해결 문제에 있어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제도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복지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구조를 다시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서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지 않은 빈곤자와 같은 주요 정책 대상자에 대한 인식이 복지인식과 중요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종단적 분석을 통해서 시기에 따라서 복지인식의 전반적인 긍정적 변동이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이는 복지국가와 관련된 논의가 한동안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아울러 복지국가 논의의 지속은 복지국가의 존립에 대한 당위적인 수준을 문제 인식을 넘어서,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성격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복지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놓고 어떤 정책 도구와 할당원칙을 수립할 것인가로 논쟁하는 본격적인 복지정치의 확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복지인식에 소득에 따른 계층의 영향력이 없다는 주장은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평균적 수준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반복지적인 인식이 강한 집단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방향으로 분포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평균적 영향력이 없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보수성이나 비일관성 등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인식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한 ‘강남좌파’와 같은 계층과 복지인식의 혼합 양상이 실증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인식의 다양성의 증대는 복지국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집단의 부정적 태도의 강화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한 바, ‘강남좌파’와 같은 현상은 고소득 집단으로서 ‘강남’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고학력집단으로서 ‘강남’과 좀 더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복지인식에 있어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복지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가운데 소득의 경우 복지인식이 낮은 집단에서 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복지지위의 경우는 복지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정적인 효과가 있는 등 분위별 차등적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복지국가의 확대에 따른 증세나 정책 내용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 이와 같은 ‘수평적’ 분포 양상이 ‘수직적’인 형태로 이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복지인식에 대한 소득과 복지지위의 효과가 복지인식의 전체 분위로 확산되는 평행이동을 보일지는 앞으로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동을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적 변화와 아울러 설명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기법과 분위회귀와 같은 분석 모형들이 기존의 복지인식 연구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입체적인 관찰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한 방법론적 의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결론의 상당부분은 이와 같은 분석 기법에 의해 도출될 수 있었다. 복지인식과 같은 다차원적이고 퍼지(fuzzy)한 개념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것과 같은 개념의 공간화와 관련된 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면서 개념의 스펙트럼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아울러 정책 인식 연구에서 평균뿐만 아니라 분포의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복지인식과 같은 정책 태도를 다루는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법들을 사용한다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발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사현. (2012).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한국사회정책*, 19(1), 9-38.
- 김상균·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5(3), 1-33.
- 김수완·김상진·강순화. (2014).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2), 67-90.
-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211-240.
-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 183-212.
- 노법래. (2012). 정책 태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에서의 국가 책무성과 보편성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0(4), 1-21.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백정미·주은선·김은지. (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319-344.
- 안상훈. (2000). 복지정책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한국사회복지학*, 43, 193-221.
- 안상훈. (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163-192.
- 이상록·김형관. (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29(3), 433-458.
- Aldrich, J. H., McKelvey, R. D. (1977). A Method of Scaling with Applications to the 1968 and 1972 Presidential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1), 111-130.
- Brady, H. E. (1985). The perils of survey research: Inter-personally incomparable responses. *Political Methodology*, 269-291.
- Derks, A. (2004). Are the underprivileged really that economically "leftist"? Attitudes towards economic redistribution and the welfare state in Flander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3(4), 509-521.
- Finucane, M., Samet, J., Horton, N. (2007). Translational methods in biostatistics: linear mixed effect regression models of alcohol consumption and HIV disease progression over time. *Epidemiologic Perspectives & Innovations*, 4(1), 4-8.
- Geraci, M. (2014). Linear quantile mixed models: the lqmm package for Laplace quantile regression.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57(13), 1-29.

- Geraci, M., Bottai, M. (2014). Linear quantile mixed models. *Statistics and Computing*, 24(3), 461 – 479.
- Hasenfeld, Y., Rafferty, J. A.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 1027–1048.
- Hong, K. Z., Song, H. K. (2006).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Korean Welfare Regime. *Journal of Social Policy*, 35(2), 247–265.
- Jones, K. (1994). *The making of social policy in Britain, 1830-1990*. London: Athlone Press.
- King, G., Murray, C. J. L., Salomon, J. A., Tandon, A. (2004). Enhancing the validity and cross-cultural comparability of measurement in survey researc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01), 191–207.
- Koenker, R. (2004). Quantile regression for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Multivariate Analysis*, 91(1), 74–89.
- Korpi, W. (1980). Social policy and distributional conflict in the capitalist democracies. A preliminary comparative framework. *West European Politics*, 3(3), 296–316.
-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Kwon, S., Holliday, I. (2007). The Korean welfare state: a paradox of expansion in an era of globalisation and economic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6(3), 242–248.
- Larsen, C. A., Dejgaard, T. E. (2013). The institutional logic of images of the poor and welfare recipients: A comparative study of British, Swedish and Danish newspaper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3), 287–299.
- McMillen, D. P. (2013). *Quantile regression for spatial data*. New York: Springer.
- Poole, K. T. (1998). Recovering a basic space from a set of issue scal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3), 954–993.
- R Core Team. (2008).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 Sainsbury, D. (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s, D. O., Lau, R. R., Tyler, T. R., Allen Jr., H. M. (1980). Self-Interest vs. Symbolic Politics in Policy Attitudes and Presidential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3), 670–684.
- Stark, A. (1997). Limousine Liberals, Welfare Conservatives: On Belief, Interest, and Inconsistency in Democratic Discourse. *Political Theory*, 25(4), 475–501
- Twisk, J. W. R. (2013).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for epidemiology: a practical gu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Welfare Attitudes among Social Classes and across Periods in South Korea

Beop-rae Roh

There are thre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The first is to examine the structure of welfare attitudes and measure them in South Korea.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trends in welfare attitudes. The third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class on welfare attitudes. This study is focused in particular on the different item functioning (DIF) problem that can be found in survey studies in political and policy sciences, and focused on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eriod and class on the distribution as well as the mean effects of welfare attitud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ldrich -McKelvey Scaling spatial modeling for policy attitudes, and a linear quantile mixed model that is an application of quantile regression to a linear mixed effects model. This study found that the spectrum of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is composed of agreement on providing free public social services such as childcare on one side and agreement on providing private social services such as medical services that require relatively more public intervention on the other side of the spectrum, and attitudes towards the main policy target groups such as the poor are also important in determining welfare attitude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has been a trend of positive movement in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for the past five years. Finally, this study found partial effects of social class by income level and welfare status measured by public transfer income replacement rate.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re are transactional characteristics to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Keywords: welfare attitudes, income, welfare status, Aldrich-Mckelvey Scaling, linear quantile mixed effects model】